北, 동창리 ICBM발사대·신포 SLBM시험장 폐기 여부 관심

핵실험장 이어 미사일 시설 폐기 땐 핵・미사일 동결 가시적 조치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이 파괴중이라고 말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에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관련 시설 폐기 절차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미사일 엔 진 시험장도 파괴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 어 ABC방송과 인터뷰에서는 "그들은 특 정한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추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혀 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어떤 장소에 있 는 미사일 시험장을 제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에 국제 적인 시선이 모인다.

우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언급대로 미 사일 엔진시험장 등의 제거에 나선다면 이 는 핵실험장 폐기에 이은 조치로, 핵・미사 일 동결의 가시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수

이와 관련, 군 당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대형 로켓엔진 시험시설과

대형 발사대,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인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장, 평양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 등의 움직임 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들 지역 의 시설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에 장착되는 로켓엔진 시험이 이뤄 졌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최근 평앙북도 구성시 이하 리에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인 '북극성 2형'의 지상 시험용 발사대를 폐기한 바 있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13일 "한미가 집 중적으로 감시하는 미사일 시설에서 아직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폐기 예상 미사일 시설로는 ICBM 급 미사일 엔진시험이 이뤄진 동창리 로켓 시험장과 장거리 로켓 발사대를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작년 3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액체연료를 쓰는 신형 엔진 연소시험에 성공하고 공식 매체 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연소시험을 참관 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3·18 혁명' 으로 극찬하고 엔진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를 업 어주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추진력 80tf(톤포스: 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로 추정되는 이른바 3·18 혁 명 엔진은 IRBM급 화성-12형의 엔진으 로 이용된 것으로 분석됐고, 작년 5월 14 일 이 엔진을 장착한 화성-12형이 성능을 입증했다. 이후 발사된 ICBM급 화성-14· 15형도 1단 추진체에 3·18 혁명 엔진을 장

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함경북도 동해안의 신포 조선소 인근 에선 주로 SLBM 시험발사와 엔진시험이 이뤄진다. 북한은 작년 8월 신포 앞바다 에서 SLBM인 북극성-1형을 시험 발사했 다. 같은 해 9월에는 신포에서 SLBM 개 발을 위한 미사일 엔진 지상 분사시험이 진행된 바 있다.

평양 산음동에 있는 미사일 종합 연구단 지도 폐기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곳에서는 그간 각종 탄도미사일 기술개발과 함께 엔 진시험이 진행돼왔다. 군의 한 관계자는 "평양 산음동 연구단지에선 주로 실내에서 미사일 기술개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며 "실내 시험은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 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장에 이 어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 관련 미사일 시 설 폐기에 나선다면 이는 역으로 핵・미사 일 고도화 기술을 완성했다는 자신감 때문 일 것으로 분석했다.

6차례의 핵실험으로 자칭 '핵보유국' 선 언을 한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바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 험장 폐기는 핵 기술이 완성됐다는 자신감 의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엔진시험장도 전면 폐기한다면 ICBM과 관련한 엔진 고출력 기술과 클러 스터링(엔진 결합)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 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미 공동성명후 로드맵 촉각 초기 비핵화가 최대 관건

미 폼페이오-북 리용호 파트너 3~6개월간 주고받기식 진행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단 계별 동시 행동 원칙'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힘에 따라 양측이 주고받기식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주목된다.

우선 정상회담 때 공개된 대로 마이크 폼 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간 후속 협상이 차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 하는 주체가 될 전망이다. 아직 시기는 확 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북미 간 후속 만남 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 파트너로는,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이 될 것 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동성명 가운데 4개항 합의인 ▲평화・ 번영의 새 북미관계 수립 ▲ 영속적이고 안 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 북한의 비핵화 노 력 ▲ 한국전 미군 포로·실종자 유해발굴 이행과 관련해 북미가 어떻게 주고받기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미국측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연말 중간 선거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로드맵이 짜일 것이라는 추론도 제기된다. 다시 말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외교 성과물로 활용하기 위 해 연말 중간 선거 때까지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 한편 2020년 대통령 선거 에 도전해 승리하기 위해 그 시점에 맞춰 북한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려는 의지를 갖 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의 조속한 이행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도 '다음 단계의 추가적 선의의 조치'를 언급 하면서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차후 3~6 개월간 진행될 초기 단계 조치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특히 미 조야에선 북한이 핵탄두 핵물 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의 해 체, 폐기, 국외 반출을 해주길 요구하고 있 다. 아울러 핵시설 및 핵무기 신고서 제출 을 시작으로 비핵화 절차를 밟아 나가는 방 안도 논의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고위급관리 간 후속 협상의 핵 심의제라고할수있다. 나아가 우라늄농 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 영변 핵시설을 모니터링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등의 북 한 복귀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공동성 명 서명식 후 기자회견에서 "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른 시일 내 국 제 사찰단의 방북이 이뤄질 공산이 커 보인

이런 주고받기식의 3~6개월 로드맵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이행된다면, 그 이후 조 치로 본격적인 사찰과 검증을 통해 CVID 확인 작업을 할 것이고 그에 조응해 '완전 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대북안전 보장' (CVIG) 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전망 된다. CVIG로는 종전선언(불가침선 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의 정치적 조치 이외에 경제제재 해제 등 방안도 고려될 수

끔하게 종료된다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가장 바람직 한 상황이 될 전망이다.



'볼턴과 악수하는 김정은' 北 노동신문 보도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 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악수하는 모습을 13일 보도했다.

"재팬패싱" 몰린 日, 북과 대화 원하지만… 일본인 납치문제 등 견해차 "전망 불투명'

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 싼 북일 간 견해차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 하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2일 이처럼 CVID와 CVIG가 2020년에 깔 밤 기자들에게 납치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을 얻어 가면서 일본이 북한과 직접 마주 보며 해 결해야 한다"며 북일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한 국무위원장과 한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했다고 밝 혔다. 하지만 공동성명에 이 문제는 포함 되지 않았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 성은 오는 14~15일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 회의 '울란바토르 대화'에서 북한 당국자 와의 접촉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 회의에 외 무성 아시아대양주국의 참사관급을 파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8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열 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 의에서 북일 외무상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 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언론은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 위원장이 참석 하는 경우 아베 총리가 만나는 방안도 거

일본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재팬 패 싱'(일본 배제)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접촉을 여러 경로로 모색하는 것

으로보인다. 요미우리는 "그러나 현시점 에서 북일 외무성 루트는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가 기타무라 시게루 (北村滋) 내각 정보관이 이끄는 정보기관 계통 루트도 활용해 북한과 물밑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납치 문제에 대해 북한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납치 피해자의 전원 즉시 귀국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북한이 논의에 응한다 해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



